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

새로운 의제 선정 논의 예정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방안을 주제로 논의해왔다. 지금까지 기업과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목적은 설립신고를 완료한 특고종사자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적인 특고종사자로 분류되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실태를 검토하였고, 플랫폼노동으로 배달업 종사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현황을 공유하였다.

2021년 1월부터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발제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 구체적 쟁점에 관하여 공익위원 및 간사단의 토론과 의견 조율 과정이 있을 예정이다. 특고종사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방안 논의를 계속하면서 2021년 3월 또는 4월 중에 새로운 의제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와 간사단회의, 공익회의를 배치하여 두 개 의제를 논의하고 내용을 만드는 과정을 병행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이 회의 일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전체회의 일정 등이 순연하게 되면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토론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고, 그에 따라 특고종사자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방안 정리와 새로운 의제 선정과 논의가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활동은 2021년 10월 9일 종료 예정이다.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 중심으로 논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고용형태 다양화 시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마련’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전국민고용보험 관련 논의에 집

중했다. 그러나 부과징수체계개편 및 모성보호사업 등에 노사정 이견이 있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1년에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의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EITC,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각 제도가 개별적으로 확대되어 추진됨에 따라 중복지원 및 상대적으로 비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운영방향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논의 시한(2021. 10. 10.)을 고려하여 1~2분기 중 향후 의제 선정 및 논의를 거친 후, 3분기에는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을 최종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 분과위원회 |

건강보험제도 관련 논의 최종 정리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는 2020년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재정지출관리, 재원조달, 거버넌스 개편, 연계·협력 등 총 5가지 대주제를 정하고, 논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했다. 2021년 1분기 중에는 정리된 쟁점을 중심으로 노사정 간사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논의 내용들을 최종 정리할 것이다.

분과위는 건강보험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장기요양보험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1~2분기 중 장기요양보험 의제 정리 및 논의를 한 후, 논의시한(2021. 10. 10.) 내 내용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

노사정 주체별 양극화 해소 역할 검토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는 2019. 11. 11. 발족 후, 2020. 12. 31.까지 총 15차 전체회의, 노사정 간사회회의(5회), 공익위원회의(1회), 준비회의(1회), 확대간사회회의(13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년간 양극화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해서 ①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②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③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큰 주제로 나누어 진단하였고, 2020. 11. 11. 지난 1년간 위원회의 논의 경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 주체별 양극화 해결을 위한 역할을 검토하고, 양극화의 현실 인식에 대한 공감대 등을 형성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2월까지 코로나19 협약에 기반한 직업능력훈련 및 고용서비스 관련 구체적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

법 개정 위해 3월까지 의견 조율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발족했다. 지금까지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어업 고용노동 및 산업안전 현황 및 어선원 고용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선내안전보건 기준의 미비와 20톤 미만의 어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상황

에서 규제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계 속에서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선원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법제도 및 행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해결방안에 대해서 노사정간 이견이 있다. 정부는 20톤 미만 어선원에 대해서도 선원법으로의 일원화를 통해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수부로의 업무 일원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어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원법으로의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20톤 이상의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하향평준화 한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입장 차를 좁히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는 작년 12월부터 간사회의를 운영하여 조율중에 있다.

위원회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늦어도 3월까지 의견 조율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에 이어 산업안전 관련 법 개정예수반된 임금 및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시설 및 생계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에 따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관광산업위원회 |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 위한 정책대안 마련

관광산업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고용위기에 처한 관광산업 주요 업종(호텔·면세점·여행사 등)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관광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 6. 19.(금)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2개월여 만에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은 해당 합의를 통해 대면서비스에 능한 숙련노동자들이 업계를 떠나

지 않도록 고용유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고용조정에 취약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를 토대로 보호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관광산업위는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텔업 고용변화와 대응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제주 소재 호텔 각급 161곳을 대상으로 고용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용역 결과 호텔업 종사자 4명 중 1명꼴로 일터를 떠난 상태이며, 향후 업계 구조조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관광산업위 논의는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으로 넘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관광산업은 심각한 체력 고갈에 빠진 상태다.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단절과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다. 관광산업위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계획이다.

| 여성위원회 |

돌봄노동 사회화 위한 심층 논의 진행

여성위원회는 노동부문 계층별 위원회 중 하나로 2020. 8. 4.(화) 출범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여성·청년·비정규 노동자들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공식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성위는 출범 이후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의 일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직장맘 상담을 통해 본 여성노동자 지원방안 △코로나19가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돌봄노동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의 동향과 해결 과제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 개선의 모색 △코로나19와 여성노동 정책과제 △코로나19와 여성노동자 건강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심화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여성 비중이 높은 대면업종의 고용위기를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위기발 경제위기와는 다른 ‘여성화된 위기’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향후 비대면화를 촉진하는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으로 인해 대면업종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성별화된 위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위는 2021년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심층 논의를 이어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의제를 구체화한 뒤, 이를 토대로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가칭 ‘돌봄노동 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혀갈 계획이다.

한편 여성위는 모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모성보호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의 지방노동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피해를 당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신속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 비정규직위원회 |

4개 의제 순차적으로 논의

비정규직위원회는 2020년 8월 4일 출범하여 1년간 ①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② 코로나19 노사정 합의에 대한 비정규직 의견 개진, ③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노동권 보장, ④ 민간위탁 비정규직 보호방안, ⑤ 취약계층 조직화 지원 방안, ⑥ 간접고용 남용에 대한 규율과 하청업체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작년 말까지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여 플랫폼 노동 관련 위원회 신설을 본위원회에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처 노사정 합의에 대해 논의하여,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입안 시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을 통해 적용 대상을 비정규직과 특고 종사자에게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올해에는 위의 6개 의제 중 나머지 4개 의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상반기에 논의를 진행할 ③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노동인권 개선, 근로감독 강화 및 조직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며, ④ 민간위탁 비정규직 보호방안의 경우,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민간위탁 간접고용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사안에 대한 공론화와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위원회 |

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 마련

청년위원회는 2020. 8. 4. 발족 후, 2020. 12. 31.까지 총 9차 전체회의, 준비회의(2회), 준비위원회(2회), 기획토론회(1회)를 개최하였다.

청년위원회는 코로나19와 청년 일자리, 수습·인턴·실습·어시스턴트 등 청년취취형 노동 보호, 지역청년 의제, 고졸 청년 일자리와 차별, 청년 부채,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평등 등을 의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 1. 위원회는 20년 하반기 발주한 연구용역인 ‘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 결과에 대한 외연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1년에는 5곳 정도의 지역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광주에서 지역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채용성차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위원회 |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이 핵심 의제

2020년 8월 4일 노동자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계층별 위원회인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원회가 발족한데 이어, 사측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위한 계층별위원회가 2020년 11월 26일 출범했다.

2021년 위원회 핵심 이슈는 ‘코로나19 대응’이다. 전염병사태로 소상공인계층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비롯하여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비나 언택트 소상공업 육성에 관한 주제를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계층 전반에 걸친 최근의 위기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대기업-임대업자-소상공인 간 이윤분배, 미비한 디지털 전환 수준, 합리적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데이터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종합적·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맹사업 소상공인 보호와 소상공인 상표권의 확립이 논의의제로 제안된 바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행정 실질화, 언택트시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이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